

## 26.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 상정일자 :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10월 16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지형재 환경수자원장)

#### ☐ 제안이유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하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및 감면기준의 이원화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22조)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공고 절차의 이원화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현)

#### □ 제안 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23. 7. 1.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관할 구역 변경으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군위군에서 시행 중이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규정 등을 시와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하수도법」 제61조<sup>15)</sup> 및 제65조<sup>16)</sup>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법령 및 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검토사항

- 市-군위군 공공하수도 부과기준(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 단계적 통합
  - 공공하수도 사용료(안 제12조)는 군위군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까지는 기존 군위군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되, '26년부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7년 1월 고지분부터는 대구시의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상·통합 기준을 마련함.

15)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군위군 지역 적용)】

업종별	단계별 (㎡)		사용료(원)				비 고
			2024.1월 고지분부터	2025.1월 고지분부터	2026.1월 고지분부터	2027.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단계	1 ~ 20	283	308	400	490	'25년까지 기존 군위군 요금 적용 ↓ '26년 1월 고지분부터 1차 인상 ↓ '27년 1월 고지분부터 市 기준과 동일적용
	2단계	21 ~ 30	394	430			
	3단계	31 이상	535	583			
일반용	1단계	1 ~ 50	516	562	590	610	
	2단계	51 ~ 100	617	672			
	3단계	101 ~ 300	773	842	1,240	1,630	
	4단계	301 ~ 500	978	1,066			
	5단계	501 이상	1,241	1,352			
대 중 탕 용	1단계	1 ~ 300	391	426	460	490	
	2단계	301 ~ 500	468	510			
	3단계	501 이상	586	639	660	680	
전용 공업용	기본	1 ~ 200	516	562	620	680	
	초과	201 이상	826	899			

\* 기존 군위군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5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중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안 제17조)은 군위군 지역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시 군위군에서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26년부터는 대구시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군위군 2,300천원/m³('14. 12월 고시 기준), 대구시 1,763천원/m³('23. 8월 고시 기준)

- 사용료 등의 감면제도(안 제22조)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 시 기존 군위군 지역의 감면기준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고, '26년부터는 대구시와 동일한 감면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 부칙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사용료 산정기준, 감면기준 등을 위 내용과 같이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설정

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둔 것임.

##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23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 등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와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 부과 기준의 일시 통합에 따른 군위군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까지는 기존 군위군 요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26년부터 감면제도·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27년부터 대구시와 동일한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원활한 하수행정 추진과 주민 혼란의 방지를 위해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통합 부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시와 군위군 관련 부서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유예기간 및 통합시기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23. 4월 군위군에서 대구시 안 수용

- 다만,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비해 현실화 정도\*가 낮아 주민들이 비교적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사용료 인상 및 감면제도 변경에 따른 군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징수 등 후속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요금 현실화율('22년 결산기준) : 대구시 76.4%, 군위군 7.1%

**참고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3. 10. 현재)****○ 대구시**

구분	사용구분 (m <sup>3</sup> /월)	연도별 단가(원/m <sup>3</sup> )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후
가정용	1m <sup>3</sup> 당	360	420	490
일반용	1 ~ 100	450	520	610
	101이상	1,210	1,400	1,630
욕탕용	1 ~ 500	360	420	490
	501이상	500	580	680
산업용	1m <sup>3</sup> 당	500	590	680

**○ 군위군**

업종별	단계별 (m <sup>3</sup> )		사용료(원)				
			2021.1월 고지분부터	2022.1월 고지분부터	2023.1월 고지분부터	2024.1월 고지분부터	2025.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단계	1 ~ 20	218	238	260	283	308
	2단계	21 ~ 30	305	332	362	394	430
	3단계	31 이상	413	450	491	535	583
일반용	1단계	1 ~ 50	399	434	473	516	562
	2단계	51 ~ 100	477	519	566	617	672
	3단계	101 ~ 300	597	651	709	773	842
	4단계	301 ~ 500	755	823	897	978	1,066
	5단계	501 이상	958	1,044	1,138	1,241	1,352
대 중 탕 용	1단계	1 ~ 300	302	329	358	391	426
	2단계	301 ~ 500	361	394	429	468	510
	3단계	501 이상	453	494	538	586	639
전 용 공업용	기본	1 ~ 200	399	434	473	516	562
	초과	201 이상	<b>638</b>	694	757	826	899

**참고 2****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23. 10. 현재)**

대 구 시	군 위 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li> <li>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또는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li> <li>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li> <li>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li> <li>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li> <li>2. 소년 · 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li> <li>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li> <li>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li> <li>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한 경우</li> <li>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li> <li>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공자 가족</li> <li>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li> <li>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li> <li>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 <li>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li> <li>1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li> <li>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14.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li> <li>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li> <li>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위군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 지지 않도록 유예기간 중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li> <li>◦ 기존 군위군에서 감면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도 철저히 해주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li> <li>◦ 사전 안내 및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음.</li> </ul>

##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